

[기업 거버넌스]

27일 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김수현 지주회사/미들스몰캡 02-709-2650 / seankim@ds-sec.co.kr

2025.02.26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2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소액주주도 적극적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정부/여당은 자본 시장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자본시장 참여자 상당수는 상법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자본 시장법에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고 주장했다. 자본 시장법은 상장된 회사만을 규율하며 동시에 분할/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본 시장법 개정의 한계는 ‘분할과 합병’ 등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가 이뤄진다는 점과 절차적인 부분만을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상법 개정은 이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해석된다. 예측하기 힘든 기업의 다양한 주주 침해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다만 거부권 행사 예상

이로써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서명) → 공포 → 시행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비친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일 여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되어도 차기 대선 공약 과정에서 상당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 높아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정부에서 상법 개정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의지가 확인됐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상당한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들의 주식 시장의 직접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점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국민적 여론 형성될 전망이다. 25년 상법 개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표1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안건	현행	개정안
이사 충실의무 확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주주'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사회 의결로 전자투표 실시	전자투표 의무화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구분	내용
제안 배경	기업의 경영위축 등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
상장법인 합병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계열사 간 합병	비계열사간 합병뿐만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이 아닌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